

# 세계지방자치동향



- (독일) 독일 지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현황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COVID-19대책
- (미국) 텍사스 주 Dallas County의 COVID-19 현황 및 대응
-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COVID-19 대응과 임파워먼트  
: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를 사례로
- (일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일본 정부 및 도쿄도의 경제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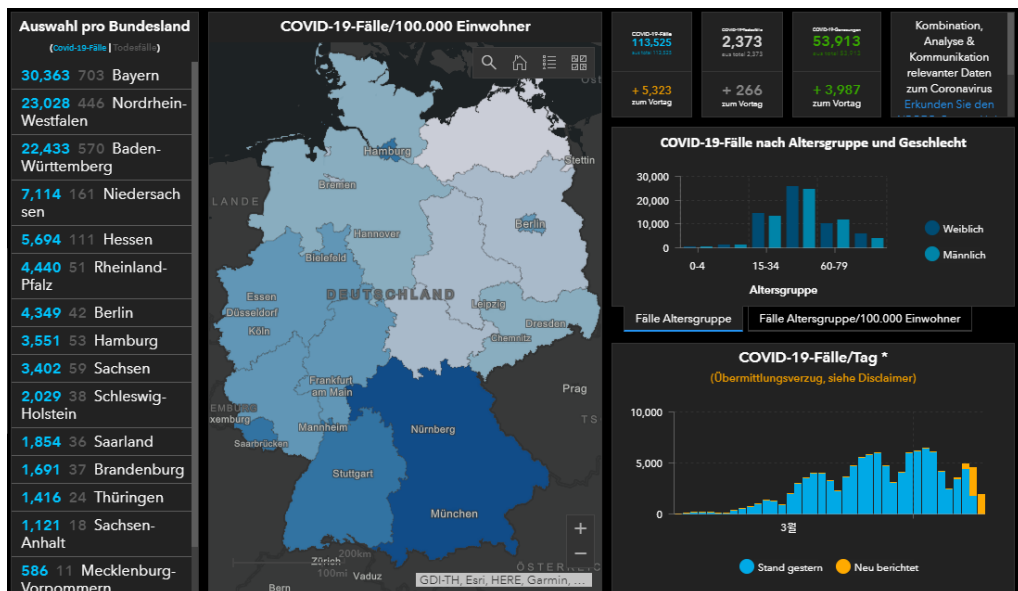


## 독일 지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현황

### 개요

- 2020년 1월 28일 독일의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6명의 확진자를 유지하던 중 2월 25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이하 NRW) 주의 하인스베르크(Heinsberg)를 기점으로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었음
-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원고의 모든 자료는 2020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경우는 초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하인스베르크가 속한 NRW 주를 사례로 하였음

### 독일의 COVID-19 현황



| 그림 1 | 독일의 각 주별 COVID-19 누적 확진자 및 관련 현황(2020.4.10. 0시 현재)

- 독일의 COVID-19 누적 확진자 수는 4월 10일 현재 113,525명으로 초기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서부와 남부의 3개주(바이에른, 바덴-뷔템베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2만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듯 이탈리아 여행자, 초기 확진자의 카니발 축제를 통한 확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그림 우하단의 일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4월 1주를 정점으로 4월 2주차에는 확진자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음

## 연방 및 지방정부의 대응책

시행일자	대응책	비고
2020.3.15	관내 대학의 시험, 강의, 연구활동 취소 및 여름학기 20일 연기	NRW 주정부
2020.3.16	독일 접경 5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국경통제 실시	연방정부의 조치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업시설 및 종교시설의 폐쇄,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 장거리 여행버스 운행 금지	
	전 국민의 국내외 여행 금지 권고	
2020.3.18	영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자의 30일간 EU국가 입국금지	EU 및 쎈겐조약 국가 전체에 해당
	COVID-19 감염병의 심각성 호소와 대응을 위한 연방총리의 대국민 담화	연방정부
2020.3.22	연방 및 주정부 감염병 대응 화상회의 및 부활절 연휴까지 Abstand halten(사회적 거리 1.5미터 유지), Kontaktverbot(접촉금지) 등의 대응책 발표	연방 및 주정부
	NRW주정부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 250억 투입 결정	NRW 주정부
2020.4.8	영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자의 30일간 EU국가 입국금지 5월 15일까지 연장	EU 및 쎈겐조약 국가 전체에 해당

## COVID-19 대응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논란

- 초기대응의 부실
  - 남부의 바이에른 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확진자의 근무지를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
  -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하인스베르크 거주자가 확진되었고, 이 확진자가 도시의 카니발 축제에 참가한 것이 알려지며 확진 하루 뒤부터 밀접접촉자를 찾아 자가격리 시켰음
  -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카니발 축제를 금지시켰는데, 독일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를 강행함으로써 독일 내 COVID-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었음
- 기존 진료시스템 및 코로나 핫라인의 문제점
  - 독일의 진료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가정의학과에 해당하는 Hausarzt 및 전문의가 있는 Facharzt로부터 시작됨
  - 이러한 병원들은 평소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가 어려운데, 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3월초에도 지정병원 등을 선정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Hausarzt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진료 거부가 빈번히 일어나고, 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병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
  -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추세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도시별로 코로나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의심증상자는 Hausarzt를 방문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코로나 핫라인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여 대응 노선을 변경하였는데, 의심 증상으로 전화를 해도 통화량이 많아 1시간 이상 계속 연결을 시도해야 하고, 경미한 증상, 위험 지역 또는 위험 지역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원화된 확진자 집계 시스템
  - 독일 내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던 3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로버트-코흐 연구소(Robert-Koch Institut)는 공식적으로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통계를 매일 발표했는데, 각 지방정부의 발표와 차이가 있어 일별로 3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로버트-코흐 연구소장은 3월 17일 공식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확진자 집계 시스템이 이원화(연방정부: 전자집계시스템, 지방정부: 자체집계시스템)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4월 들어 일원화 된 확진자 집계 시스템을 갖추었음

## COVID-19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노력

-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NRW주 및 각 도시들은 COVID-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함

### 1. NRW주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

- 3월 22일 각 주의 주지사들과 연방총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 이후 NRW주지사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감염병으로 인한 250억유로(약 34조원)를 투입할 것을 발표함. 주지사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주정부 설립 이래 최초라고 밝히며 상황의 엄중함을 주지시키고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함
- 한편, 이 회의에서 결정된 Kontaktverbot(접촉 금지, 가족과 동거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정책에 대해 NRW주는 주정부 중 유일하게 위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2. 지방정부간의 공조

- 인접도시인 아헨(Aachen)과 뒤렌(Dueren), 하인스베르크(Heinsberg)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과 아헨공과대학 부설병원인 3월 23일 공동의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주요 논의 내용은 COVID-19의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치료 병상을 2배가량 늘리는 방안과 각 지역의 병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참고로, 독일의 집중치료 병상은 인구 대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3.9병상으로 미국의 25.8병상, 이미 감염병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9.7병상, 8.6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대규모 중증 확진자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 3. 국가 간 지방정부의 공조

- 3개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아헨시에서는 3월 24일 아헨시장과 벨기에 내무장관이 국경에서 국경 차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독일과 벨기에의 감염병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음
- 이러한 협의에 따라 독일-벨기에 국경을 통과할 시에는 출퇴근 또는 병원진료를 제외한 필요하지 않은 국경 이동은 금지되었음



| 그림 2 | 영국 국경에서 벨기에 내무장관 de Crem(좌), 독일 아헨시장 Marcel Philipp(우)의 협의

##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COVID-19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 별로도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식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원고에서 언급한 문제점 및 논란, 대응방안 등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 별도의 사후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 독일의 COVID-19 대응책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방정부(주정부)에 예산, 의료시스템, 별도의 감염병 규정 제정 등의 상당히 많은 부분 권한이 주어져 있고, 연방정부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이 지방자치 중심의 연방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도 독일 내에서는 철저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론 기사, 칼럼,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연방제 하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COVID-19 종식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

## 오스트리아의 COVID-19대책

### 개요

- 3월초 오스트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대 감염에 직면하여 의회를 통과한 법과 행정부, 관할 부처, 지자체장들의 명령을 전방위로 시행하기 시작
- 다양한 조치들은 사태 추이를 관찰하며 지속해서 보완, 추가되고 현재도 진행 중임

### 진행 상황과 각종 정책 현황

#### 1. 연방 안행부, 사회·보건·요양·소비자 보호부의 대국민 보호 조치 발표

##### ○ 일반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 기침 시 입을 가리고 얼굴 만지지 말기
- 가급적 자주, 하루에 몇 번씩 30초 이상 손 씻기
- 증세가 있으면 집을 떠나지 말고 건강 상담 핫라인 '1450'에 전화할 것

##### ○ 상세사항

- 2020년 3월 16일~4월 13일까지 집 밖 통행금지

예외) 즉각적인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나 지장이 있을 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피치 못할 직업을 영위하고 고용 주의 허락이 있는 때, 본인과 타인을 위해 식품을 구매하거나 전달할 때, 장례식과 결혼식 등 가족끼리 긴급 필요성이 있을 때, 혼자 혹은 동거인, 개와 잠시 산책할 때, 일반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나 모든 행사는 금지

- 통금 조치와 아울러 군경을 투입,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체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민방위 군을 재소집, 전국적으로 3,500명 차출하여 위생병, 사회 서비스, 코로나 테스트 요원으로 투입함. 물류 수송에서 생긴 인력 공백을 메꿈. 일부 대사관 경비를 담당할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군인을 투입하기도 함. 현재 대체복무 중인 자는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전역한 민방위군을 재투입, 현역보다 수당을 높게 책정하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가 판단을 기다리는 중. 외출 단속은 경찰이 하며 약 2,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발생, 벌금(최고액 3,600유로) 처분. 통금 조치로 인해 사재기 현상이 급증, 적은 인



력으로 슈퍼 진열대를 채우지 못하자 민병대 동원, 중앙 물류창고에서 물품 조달.

- 2020년 3월 17일~4월 13일까지 식당, 가게, 상점, 체육관 등 영업 중단  
예외) 약국, 식품 가게나 마트, 위생, 긴급용품 판매처, 요양원이나 돌봄 센터, 장애인 서비스 시설, 수의 서비스 센터, 응급 서비스 센터, 비료나 사료 농업 물품 가게, 주유소, 대중교통, 배달 서비스, 신문 판매대, 폐기물 처리장, 정비소 등이 해당. 또한, 병원, 양로원, 유치원, 청소년 보호 시설, 캠핑장이나 대중교통 손님에게 제공할 목적의 부속 음식점도 예외에 해당
- 대중교통 이용 시 상호 간에 최소 1m 간격 유지
- 2020년 3월 10일~4월 13일까지 다음 국가들의 입국 금지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예외) 화물기, 긴급 투입기, 응급의료 항공기 등
- 2020년 3월 19일~4월 13일까지 항공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오스트리아 국적자와 체류 허가 소지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소에 머무를 것  
예외) 지체 없는 출국이 확실한 자
- 쟁쟁 조약국이 아닌 제삼국 국적자 등은 입국 금지  
예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요양사, 환승객, 4일 이전에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자나 14일 자가격리를 수행할 자
- EU국민은 입국 시에 건강증명서 제출  
증명서가 없거나 즉시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처함
- 자국민 픽업  
전 세계 약 100개국에 흩어진 약 4만여 명의 오스트리아 국민을 국내로 송환 시작. 귀국 직전 체온 측정. 귀국 후 의심이 갈 경우에만 격리
- 지역 봉쇄 조치  
티롤 주 전 지역, 케른텐 주는 하일리겐블루트 한곳, 포랄베르크 주의 여러 곳, 잘츠부르크 주의 여러 곳
- 국경 컨트롤 재도입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와의 국경 통제를 4월 7일까지;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국경 통과 제한은 5월 14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 일부는 완전 봉쇄(출·퇴근자가 많으므로)하고 지정한 일부 도로만 통과 가능

- 철도 교통 중단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간을 오가는 철도 중단

예외) 화물열차

## 2. 교육부의 원거리- 온라인 교육 조치

- 3월 16일부터 모든 초등, 인문계 하급 과정과 특수학교는 수업 중단

- 부모나 보호자가 집에서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은 학교나 유치원에 등교. 몇몇 주에서는 이 숫자가 1,000명 정도, 일부 주에서는 약 20명 정도임

- 교사는 홈 러닝 교재를 작성, 학생들에게 배포. 부활절 이후 학교 재량으로 추가 자료를 보충할 것인지 결정

- 새롭게 개발한 소통 형태로 컴퓨터를 통해 실시. 랩톱이나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해 대여 내지 지원.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이 초기에 접속 과부하나 온전치 못한 프로그램으로 순탄치 않았으나 수정, 보완됨

- 인문계 상급 과정과 고등학교들은 3월 16일부터 수업 중단

학생들은 위생 규정을 준수하면서 등교하여 필요 문서나 홈 러닝 교재를 픽업할 것. 4월 12일 부활절이 끝난 후 추가 작업 여부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 직업 학교(약 14~18세 학생)들도 새 교재를 Distance-Learning으로 추가 작업할 것

- 각 주의 모든 학교마다 학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핫라인을 개설

9~18시까지 상담. 초기에 무수한 유선 상담이 이루어짐

-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대입 학력평가 마투라 실시

5월 말에 1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실시 예정이며 기존 몇 과목에서 독일어, 수학, 외국어 한 과목으로 축소되어 실시. 구술시험은 취소함

- 대학과 연구소 휴강

- 3월 9일과 3월 16일 사이에 시청각 자료, Distance-Learning/ Home Learning 으로 전환하고 부활절까지 휴강하며, 이어 6월 말까지 추가 연장됨

- 시험은 온라인, 혹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실시, 논문으로 대체하거나 학교, 교수 재량으로 연기함

- 대학도서관, 체육관은 폐쇄 조치하며 교수들은 개강 직후와 3월 9일 이전에 코로나 우려로 세미나나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학생들에 대해 출석률 등을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

### 3. 정부, 연방 보건부의 코로나 대책

- 3월 10일을 기점으로 봉쇄와 통행 금지 등 정부 대책 발표 시작
  - 2월 25일 티롤의 호텔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이탈리아인 2명에게서 첫 감염 발생. 호텔 봉쇄. 직후 WHO는 팬데믹 가능성에 대해 발표. 다음 날 빈에서 3명의 감염자 발생. 이어 각 주에서 확진자 발생 시작. 3월 2일, 이미 시중에 마스크, 소독약이 동나고 이 무렵 야당 당수 웬디 바그너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 이어 이 숫자는 5인 이하로 단축됨. 스포츠, 예술,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모임은 취소, 불허됨
  - 3월 13일 통행금지 발표와 동시에 사재기가 시작되고 제때 진열대가 채워지지 못하자 민병대를 동원, 대도시 유통창고에서 생필품을 조달함. 화장지, 쌀, 면류와 육류제품이 바닥남. 이쉬글, 갈튀어 등 스키 관광객이 밀집한 티롤, 포탈베르크와 잘츠부르크 지역에 봉쇄령 발동, 이는 부활절 직전인 4월 8일경에야 해제됨. 또한 이 지역의 2020 스키 시즌을 조기 종식 선언함
  - 3월 16일 부활절 직후까지 모든 상점 영업 중단 발표. 슈퍼마켓이나 식품점, 약국, 병원 등만 개원하며 집수리와 관련된 수리공들은 출장만 가능
  - 부활절 직후인 4월 13일부터 400평방 이하의 소점포들은 개점 허락하고 5월 2일부터는 조심스럽게 대형 쇼핑센터들도 개점 예정. 감염 커브가 상승하면 이 조치들은 즉시 원점으로 돌아감
  - 법적 근거로는 3월 15일 의결된 “COVID-19법”. 이 법으로 COVID-19위기 극복 기금을 조성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조치를 명하고 법적인 임시예산과 노동 시장정책 재정법, 노동 시장 서비스법과 노동 계약회환법을 개정하고 이는 연방 상·하원에서 의결됨. 같은 시기, 인스브룩 검찰은 다발 발생지였던 스키 휴가지 이쉬글에 대해 “전염으로 인명을 위협하게 한 혐의”로 조사 착수
  - 기존에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샀으나 대면 없이 전화로 처방전을 신청하면 의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약국에 메일이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며, 본인이 직접 픽업하거나 약국에서 배달해 주기도 함. 배달료는 11유로. 기존에는 일부 약이나 고가의 의료 진단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부분 생략, 면제하거나 온라인으로 발행
- 마스크 등 의료용품 문제
  - 마스크의 필요성을 부정함. 문화 차이도 있으나 수급 문제에 봉착해 일반인보다 의료진에게 우선 보급하려는 정책으로 보임. 평소 독일에서 의료용 마스크 공급을 받았으나 급증하는

환자 수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할 마스크들을 압류하자 오스트리아 병원 수술들이 거의 모두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짐. 3월 중 개인이 소유한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소독약 등을 긴급히 병원에 기증해 줄 것을 방송함

- EU 국가 내의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 협의를 거쳐 독일에서 3만 장의 마스크를 의료진용으로 긴급 방출하였으나 유럽각국의 국경봉쇄로 인한 대환란 때문에 트럭이 국경을 오랫동안 통과하지 못한 사태도 벌어짐. 차후 오스트리아 항공이 중국에서 의료물품을 수송해왔으나 대부분 비상 지역인 티롤과 이탈리아로 넘어감
-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구매해 2016년 유효기간이 지난 마스크 수백만 장을 연방 군대를 투입,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사용 가능한 160만 장을 배포하였으나 이는 FFP-1클래스로서 바이러스 차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
- 마스크 조달이 심각하여지자 정부는 자급자족 가치를 내세우고 국내 회사를 선발, 의료진 마스크를 생산케 하나 원료 부족으로 전 국민 보급은 불가능. 각 가정에서 천으로 마련하려고 권고
- 마스크 사용에 관한 논란은 3월 말, 4월 초에 본격화되고 4월 6일부터 슈퍼마켓에서 중국에서 급수입한 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함. 일부 부녀자들은 가정에서 천 마스크를 제작하여 약 0~10유로로 시민들에게 팔기도 함. 정부는 유통업체들이 마스크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했으나 일부 유통업체는 반발, 고객으로부터 1유로를 받음
- 정부는 천 마스크가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자가 주변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림. 4월 14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바이러스 테스트와 감염 속도 완화 정책
  - 수상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급속도 감염으로 인한 병원 포화 상태, 사망자 급증을 보인 중국식 감염보다 물결 모양의 점진적 감염을 당면 차선택으로 선택, 의료 시설과 중환자실 포화 상태를 막고 가파른 상승 곡선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초기에 수상은 우한 발병 시에 즉시 국경 봉쇄를 통해 감염사례를 줄인 대만을 모범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 언급은 사라짐
  - 시간 소요가 많은 테스트보다 신속한 결과를 가져오는 항체 테스트를 우선 했고 후자의 테스트 결과가 오류가 많은 점은 4월 말까지 보완하기로 함. 테스트 대상은 발열 상태가 며칠 계속되는 자로서, 구급 번호로 먼저 의사를 집으로 부르고 테스트와 검진을 거쳐 격리 내지 입원 순으로 이어짐. 의료진의 다운을 막기 위해 초반부터 감기나 기침, 기타 증세로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함

- 대민 상담과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핫라인은 초기에 하루 7만 건의 문의사항들이 폭주함. 오스트리아의 병원들은 대부분 국공립이며 사립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도. 수도 빈은 프란츠 요셉 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어 오토 바그너 병원, 도나우 병원 등 시립병원들로 확대 지정함. 최대인 빈 국립대학병원은 코로나에 걸린 기저 질환자 중, 마지막 단계의 위중 환자용으로만 병상 비치
- 병원들은 일반 환자 전용과 의료진 전용 입구를 별도로 설치, 의료진 감염을 원천 봉쇄코자 하였음. 오스트리아 전체 병상 수는 약 64,000개 그 중 1,600개는 내과용. 박람회장과 체육관을 코로나 환자용으로 개조하여 수천 개의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증 환자가 급증할 경우 임시 폐쇄해 둔 재활병원도 생활 치료시설로 사용할 예정. 현재 중환자 병상은 980개 잔여. 확진자 감소 기대
- 재정 지원 정책
  -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80억 유로 패키지를 배정. 바이러스 연구로 2천 2백만 유로 배정. 1억 유로를 요양비로 책정. 가톨릭계에서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위해 백만 유로를 박애 단체 카리타스에 제공
  - 대학과 병원, 감염학 연구소 등은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함. 주로 독일, 덴마크 기관과 공동협력함. 정부는 개발 지원금을 신청할 시, 약 2천 2백만 유로는 치료제 개발, 1,000만 유로는 혁신 개발비로 편성, 지원함
- 요양사 문제
  - 요양사들은 주로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인들로서 국경 봉쇄로 인해 입국 금지에 처함.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만 데려오고 격리 기간도 부여함

#### 4. 상공회의소, 경제부, 재무부, 지자체의 기업과 상공인 공동 지원책

- 4월 13일까지 상점과 영업장 폐쇄, 통행금지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
  - 관광업, 항공사, 운송사, 호텔과 요식업소 등 서비스 산업부터 큰 타격을 받음. 봉쇄와 통금 조치 후 1달도 되기 전에 해고, 휴직이 폭증함. 일부 기업들은 파산 우려
  - 3월 14일 정부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일반적 지원 40억 유로, 긴급 지원 150억 유로, 대출 지원 90억 유로, 단축 근로(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월급을 약간 낮추고 그 중 80%를 정부가 지원, 고용주는 20% 지급) 4억 유로, 긴급 소상공인 기금 20억 유로, 세금 할부 100억 유로 등 편성함. 긴급 소상공인 기금 20억 유로는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2020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활비 지원을 받음. 1인 회사 등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시 까다로운 과정을 생략, 즉시 검토를 거쳐 한 달에 1,000유로씩 3개월 지급하며 직원을 거느린 소기업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2,000유로씩 3~6개월간 지급

- 관광업계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억 유로 보증금을 배정하여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나 보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업체들을 지원
- 3월 20일 AMS 노동 고용서비스에는 십만 명의 실업자가 등록함. 오스트리아 항공과 라우다 모션 등이 운항 중단. 승객 감소로 인해 오스트리아 국철도 1,000명 직원에 대해 단축 근로를 시행. 4월 초까지 실업률은 2019년 4월 대비 50% 증가함. 야당은 실업자 보조금을 더 높이 지급할 것을 요구
- 코로나 조력 기금은 4월 8일부터 신청. 90~100% 은행 대출 개런티를 부여.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후원도 4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 정부는 실업이나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 측에 단축 근로를 허락함. 파산이나 도산 신청 기간도 연장해줌
- 봄부터 개시되는 레스토랑들의 야외 카페 샤니가르텐 사용료를 지자체들은 면제해 줌
- 대학교도 생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회람으로 통지함
- 경제계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함에 따라 약 2~5%의 경기 위축을 예측함
- 상공회의소, 근로자 회의소, 노동조합 등은 총력을 다해 회원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  
예)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불가능하여지자 자체 사이트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마스크 구매 가능성을 알려줌. 페이스 쉴드 5개에 121유로, 혹은 167유로 등
- 전력공사나 에너지 공단 등은 요금을 미납한 세대에 전기, 수도를 계속 공급함
- 보험료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협의에 기초, 납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합의하게 함
- 상공인 회비 등 면제
- 주택 임대료 미납 시에는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보류해주고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막음
- 각종 협회나 단체들이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들의 임대료 약 2백만 유로를 빈시가 부담함

## 5. 사회 각계 조치들

- 마스크가 없어 감염 사례가 잦은 마트 직원들을 위해 계산대에 플렉시 유리 칸막이를 설치
- 현금보다 카드 지급을 권하며 처음에는 25유로 이하 구매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50유로 구매금액까지는 입력 없이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게 함. 작업상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함
- 아스파라거스 등 봄 작물 수확에 투입하던 동유럽 국가의 시즌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빈 근교 농장들은 밭일을 도와줄 것을 시민에게 호소
- 지자체마다 노인들을 위해 음식 패키지와 택시 쿠폰(50유로)을 제공

- 영업하지 못하는 일부 호텔은 음식물을 무료로 원하는 가정에 배달하기도 함. 민간단체나 협회, 개인들은 외출하지 못하는 노약자에게 물건 구매, 배달 서비스 제공
- 빈 국제마라톤, 봄 축제주간, 유럽 최대 야외 축제인 도나우강 축제, 각종 공연과 행사가 중단, 취소되면서 공연료, 입장료는 환불하거나 쿠폰으로 대체되고 예술가들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음
- 박물관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온라인으로 박물관을 안내하기도 함. 연극, 오페라 극장들도 카페라 공연으로 대체
- 빈 소년합창단은 홈 러닝으로 성악 연습. 막대한 수입 누락으로 기부금 호소
- 국립 정원들은 폐쇄, 시립 공원 등만 출입 가능. 인도가 좁아 행인들과의 간격을 1, 2미터로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빈에서는 네 군데 도로(플로리아니 가세 등)를 지정, 차도를 인도로 확대하기도 하고 이어 더 많은 도로로 확대 실시함
- 대중교통 이용이 급격히 줄고 자전거나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이가 늘자 임시방편으로 유료 주차 구역을 무료로 전환함
- 국영방송, 연방 수상청 혹은 주요 부처에서는 언론인, 앵커나 담당자들이 감염 위험으로 인해 보도나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 자체 격리공간을 조성, 자가 격리함.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1, 2주 간격으로 동료와 교대함. 인터뷰는 카메라를 통해서만 함
- 빈 에너지 전기 가스 공사, 소각장, 발전소 등도 담당 직원들이 도시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다운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근무함
- 빈의 20여 개 호텔들은 관광객이 전무해지자 하루 6유로로 오전 8시까지 밤 22시까지 홈 오피스로 방을 제공
- 국영 TV에서는 매 광고시간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본인과 조부모의 건강을 위해 조부모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함. 광고명은 “나, 우리 할머니께 안가요”임
- 연방 대통령 반 데어 벨렌은 대국민 연설에서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방문을 삼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인사도 악수가 아닌 동양식 인사를 하라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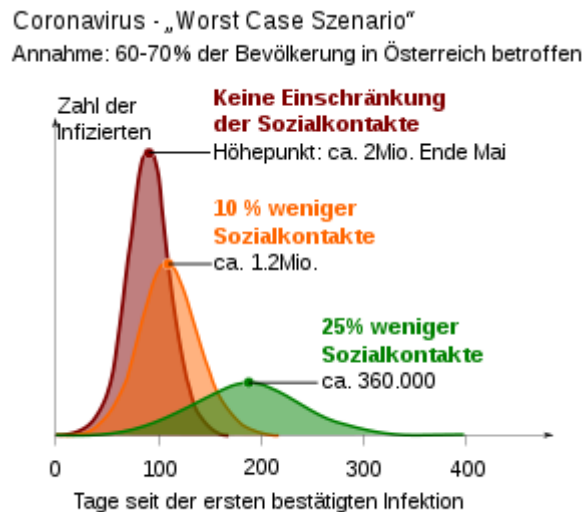
## 6. 현황

- 3월 29일, 8,291명 테스트에 1,299명 확진자에서 4월 1일 10,482명으로 증가
- 유럽국 중 유일하게 약 1,544명에게 무작위 테스트를 실시, 무증상 감염자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0.33%가 감염되었음을 확인. 따라서 4월 10일 전후 공식 감염자 13,500여 명을 포함하여 전체 감염자 약 28,500명 이상으로 추정하나 역시 변수가 많아 단언하기는 어려움

- 4월 11일 : 확진자 13,800명, 완치자 6,600명, 사망자 350명. 위중환자 250명, 위중환자 포함 입원환자 1,000명

## 문제점

- 국제화 시대에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년 전후 제조업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넘겼다가 비상시에 기존 물자조차 공급받지 못하자 국수적인 목소리가 높아짐
- 자체 생산을 도입하고 국경을 닫으며 EU국가 간의 신뢰마저 일시에 무너져 위기 이후에는 각국 정치가 재편성될 가능성 있음. 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일부 국가들의 채무와 나태함이 폭발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보이면서 유럽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협의에 이르지 못함
- 자국 위주, 폐쇄 정책, 배타정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음. 어렵게 구축되어온 공동체 의식이 다시 확립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의 미래를 지향할 추진력 필요



Quelle: DiePresse.tv, basierend auf TU Wien/dwh

| 그림 1 |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을 경우 국민의 60~70%가 급속 감염, 의료진의 과부하 야기

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COVID-19-Pandemie\\_in\\_%C3%96sterreich](https://de.wikipedia.org/wiki/COVID-19-Pandemie_in_%C3%96sterreich)





출처: ORF 국영방송. 빈의 스테판 성당 부활절 미사. 추기경 단독으로 미사 집행. 신자석은 사진으로 대체

## 참고

<https://www.sozialministerium.at/Informationen-zum-Coronavirus/Coronavirus-oesterreich.gv.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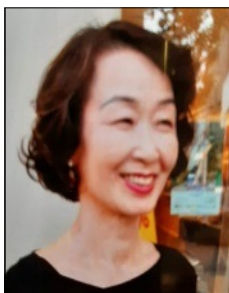
[https://www.bmbwf.gv.at/Ministerium/Informationspflicht/corona/corona\\_status.html](https://www.bmbwf.gv.at/Ministerium/Informationspflicht/corona/corona_status.html)

<https://www.wko.at/service/aussenwirtschaft/coronavirus-wirtschaftskammer-als-anlaufstelle.html>

<https://www.salzburg24.at/news/oesterreich/coronavirus-chronologie-der-covid-19-ereignisse-85125766>

<https://www.noen.at/>

<https://kurier.at/>



**김정원**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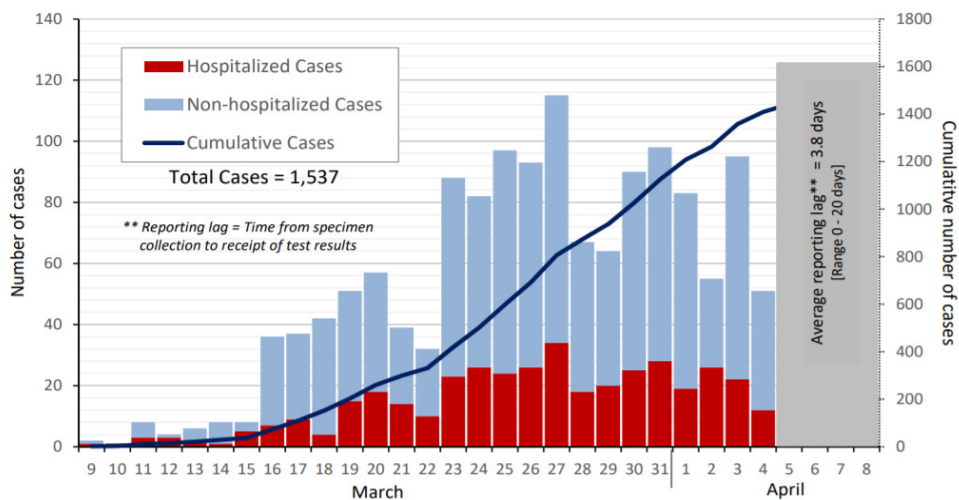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법정통역 번역공증인)

kimvienna@hotmail.com

## 텍사스 주 Dallas County의 COVID-19 현황 및 대응

### Dallas County 지역의 COVID-19 현황

- Dallas 카운티의 COVID-19 확진자는 1,537명이며 사망자는 25명임 (4월 10일 기준)
- 2020년 3월 10일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
- 첫 환자 발생 후 1주일간 일평균 2.7명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 하순부터 확진자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3월 10일~31일 기간 동안 일평균 2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4월 1일~10일 기간 동안은 일평균 90명의 확진자가 증가하였음



| 그림 1 | Dallas 카운티 COVID-19 발생 추이 (출처: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Summary)

| 표 1 | Dallas 카운티의 일별 확진자 수 (3/10~4/10)

	03/10	03/11	03/12	03/13	03/14	03/15	03/16	03/17	03/18	03/19	03/20
확진자	2	1	5	1	2	3	5	9	11	16	19
	03/21	03/22	03/23	03/24	03/25	03/26	03/27	03/28	03/29	03/30	03/31
확진자	21	36	24	14	78	56	64	72	49	61	82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총 계
확진자	100	100	90	94	97	43	106	63	108	105	1,537

## Dallas 카운티 COVID-19의 상황 특성

- Dallas 카운티의 COVID-19 전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역 내 확진자와의 접촉 및 커뮤니티 내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80.6% (1,236명)로 가장 많았음
- 국내여행 (타주)과 해외여행으로 인한 감염은 각각 7.1% (109명)와 3.4% (52명)의 비율을 보였으며, 장기요양시설 내 감염은 6.5% (100명)의 비율을 보임
- 전체 확진자 중 24%가 60세 이상이며, 41~60세가 39%, 18~40세가 35%, 17세 이하는 2%의 비율을 보임
-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위험질환 보유자는 53%의 비율을 보임
- 전체 확진자 중 입원 비율은 28% (431명)이며, 총 검사건수 대비 확진 비율은 약 14%임
- 검사 키트의 부족으로 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실제 감염자와 보고되는 확진자 수가 매칭되는데 5~7일이 소요됨
- 공동체 내 전파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표 1 | 감염 경로 별 빈도

감염경로	사례 수	비율 (%)
해외 여행	52	3.4
국내 여행(타주)	109	7.1
크루즈 여행	6	0.4
장기 요양시설	100	6.5
수감시설	31	2
직접 접촉 혹은 공동체 내 전파 추정	1,239	80.6

## Dallas 카운티의 주요 대응 조치

- 3월 12일 카운티 판사 (County Judge) Clay Jenkins는 지역 재난상황을 선포함
- 카운티 정부의 대응조치는 카운티 판사의 행정명령 (Order of County Judge)을 통해 발표됨
- 동일 가정 혹은 동일 거주 단위 내의 단체행위를 제외한 모든 공공 및 사적 단체행위 (gathering)를 제한함
- 모든 선택적 의료행위 및 치과진료를 금지함
- Dallas 카운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 주유소, 세탁시설 등의 필수 활동이나 카운티 정부가 정하는 필수 정부 업무 목적의 외출이 아닌 한 자택을 비롯한 거주지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음 (stat-at-home order)

- 지역 내 검사시설의 검사결과 갱신 사항을 매일 오후 5시까지 카운티 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 카운티 내 슈퍼마켓, 식료품점, 병원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한 물류 배송시간의 제한을 해제함. 기존에는 많은 자치단체가 소음과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배송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음
- 생필품, 음료, 식당, 약품, 의료 장비 등의 필수 품목들은 정가 이상으로 판매될 수 없음
- 고용주는 COVID-19 음성반응 혹은 진단서를 직원들의 복귀 조건으로 정할 수 없음
- 모든 바(bar)의 영업을 금지하고, 음식점 및 카페들은 Drive-thru나 포장주문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건물주는 거주시설에 대한 임대료 체납 수수료를 월 15달러로 제한해야 하며, 향후 60일 동안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음
- COVID-19 대응업무 종사자(경찰, 소방, 응급의료 등)를 지원하기 위한 COVID-19 대응 기금을 조성함. 기금은 카운티 예산 및 기부금으로 구성됨

### Dallas 카운티 대응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 Dallas 카운티의 COVID-19 대응조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필품 및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함
- 직접 대면접촉을 및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규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일반 개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음
- COVID-19 기금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역 내 확산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의 어려움과 검사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COVID-19의 확산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료 출처

- 「County Orders Issued by Judge Jenkins」, Dallas County. 2020. 4. 8
-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Summary」, Dallas County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0. 4. 10
- 「Led by science, Clay Jenkins pushed Dallas County virus response ahead of Texas」, The Texas Tribune. 2020. 4. 4
- 「Join us for a live interview with Judge Clay Jenkins about the coronavirus' effect

on Dallas County», The Texas Tribune. 2020. 4. 7

- 「Dallas County Expands Coronavirus Response», Texas Public Radio. 2020. 3. 18
- 「Dallas County Creates Response Fund for Frontline Workers Fighting COVID-19», NBC DFW. 2020. 4. 2.



**김진탁** 통신원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 박사과정)  
kjtstar6@gmail.com

---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COVID-19 대응과 임파워먼트 :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를 사례로

---

### 개요

- 일본은 COVID-19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에 시간을 요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리후생을 담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임파워먼트(역량강화)를 발휘하고 있음
- 특히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요청보다 앞서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임파워먼트는 중앙정부의 정책 마련과 실행을 전인하는 계기가 됨

### COVID-19 감염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동향

- NHK에 따르면 2020년 4월 9일 오전 3시, 현재 일본의 확진자는 4,982명(유람선 제외)임. 4월 8일은 전국적인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음. 특히 동경은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감염자가 급증함
- 2020년 4월 7일, 아베 총리는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동경 등 7도부현을 대상으로 COVID-19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긴급사태선언」을 선포. 선언의 효력은 5월 6일까지이며, 동경,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을 그 대상임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7도부현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휴업 요청에 있어 2주 정도 연기해줄 것을 타진함. 지방자치단체가 휴업 요청에 따라 발생할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이를 거부함
- 한편, 아이치현의 오오무라 지사는 현내에서 COVID-19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0일 오후, 자주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하고 현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의 자숙을 요청. 또한 중앙정부에 대해 COVID-19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긴급사태선언」의 대상으로 아이치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

| 표 1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동향

일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동향
2020년 2월 27일	제15회 COVID-19대책본부 초중고 일제 휴교 요청
2020년 2월 28일	홋카이도 「COVID-19긴급사태선언」(2월 28일~3월 19일)
2020년 3월 12일	WHO COVID-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
2020년 3월 19일	오사카 - 호고현 왕래 자제를 요청, 3월 20일~22일 연휴기간
2020년 3월 25일	동경, 주말 외출 자제 요청 "감염폭발 중대국면" 선언
2020년 3월 27일	15개현이 동경으로의 이동 자속 요청
2020년 3월 28일	아베 총리 COVID-19 대응 및 추가 경제대책 설명
2020년 4월 7일	아베 총리7 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
2020년 4월 8일	전국 지사회 긴급대책본부 손실 보상요구 긴급 제언

### 홋카이도 : 지역 특성에 따른 선제적 이동 제한

- 홋카이도내에서 2020년 1월 28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홋카이도내 광범위에서 확진자 발생. 또한 1월 27일, 전시회에 참가한 6명의 집단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함
- 대도시로 집결 후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홋카이도 특유의 도시 구조상 문제에 입각하여 확산 속도를 억제할 대책이 요구됨
- 2020년 2월 28일, 스즈키 지사는 「COVID-19긴급사태선언」(2월 28일~3월 19일)을 선포하여 외출 자제 요청
- 2020년 3월 18일, 스즈키 지사는 「COVID-19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폭발적인 감염확대, 의료붕괴는 회피했다고 긴급사태의 효과를 설명함
- 2020년 3월 19일,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실시하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실행하는 「홋카이도 모델」의 확립을 목표로 「COVID-19긴급사태선언」을 종료함
- 2020년 3월 20일부터는 COVID-19감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홋카이도민과 사업자가 단결하여 대응해가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함



| 그림 1 | 긴급사태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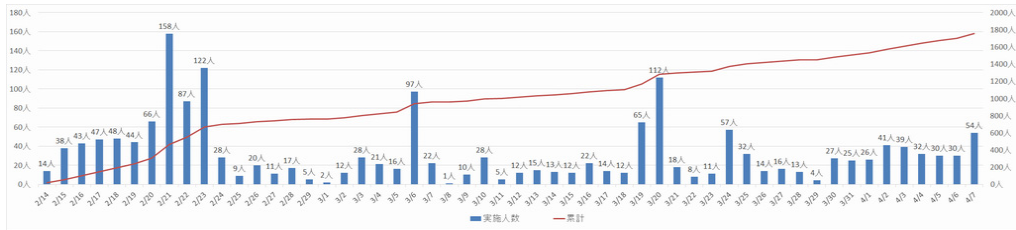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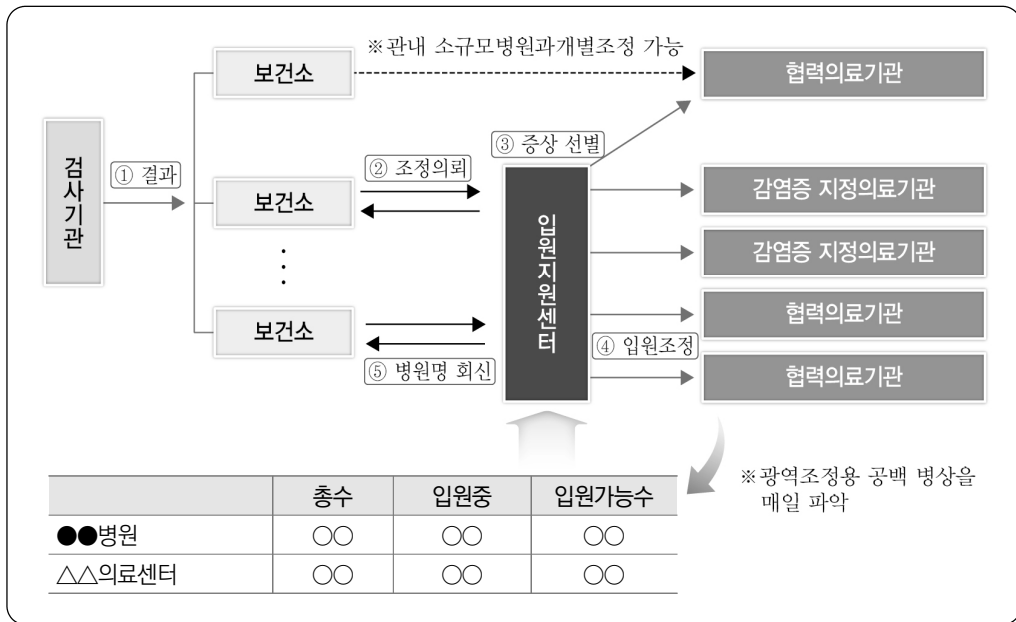
| 그림 2 | 긴급사태선언 효과 설명

### 와카야마현 : 지역의료 유지와 병원감염 극복후 안전선언

- 2020년 2월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 (와카야마현)에서 이를 뒤인 2월 15일, 남성 외과 의사에 이어 같은 외과에서 일하는 남성 의사(50대)와 그의 아내(50대), 입원 환자의 남성(60대)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 니사카 와카야마현 지사는 병원감염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사 동료와 입원환자로 감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의사, 간호사, 직원, 입원환자, 관련업체등 총 474명의 PCR 검사를 완료함. 감염이 확인된 5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됨
- COVID-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2020년 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폐쇄했던 외래진찰을 재개함
- 이토 병원장은 2020년 3월 4일, “오늘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공헌하고 싶다”고 병원의 안전을 선언함
-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지역 연계과 및 의료 상담과, 방문 간호스테이션, 주택 개호지원 사업소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와카야마현의 고령화는 32%)에 대처해야 함. 따라서 니사카 와카야마현 지사와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업무 재개를 위해 연계함
- 와카야마현은 인구에 비해 많은 PCR 검사를 실시함.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을 누구나 신뢰하여 조속히 재개하기 위함. 그리고 확진자가 근무하던 콜센터를 하루 빨리 재개하기 위해, 일시에 다량의 PCR검사를 실시함







| 그림 6 | 오사카부의 입원 지원센터와 의료기관 연계도

- ⑤ 의 회신에 따라 각 보건소는 지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의 입원을 조정함. 중증자는 PCR 검사 결과 대기 단계에서 입원 지원센터에 문의함. 향후 중증자 입원 시설 확보와 광역 조정을 위해 입원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 (조정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함. 조정 대상 의료기관 이외는 광역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각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입원을 조정하여도 무방함

## 시사점

- 일본은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됨
-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임파워먼트(역량강화)를 발휘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홋카이도는 도민의 거주와 이동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여 감염확대를 방지함. 소위 우한의 봉쇄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감염확대를 회피함
- 와카야마현은 고령화율이 높고 콜센터 담당자가 감염됨에 따라 대량의 PCR검사를 실시함. 또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도 현과 연계하여 조속히 안전선언을 함
- 오사카부는 중증자 대처와 확진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전문가회의를 통해 입원 지원

센터 설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광역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자료출처

- 니혼테레비 NEWS24 <https://www.news24.jp/>
- 동경신문 <https://www.tokyo-np.co.jp/>
- 마이니치신문 <https://mainichi.jp/>
-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 <http://www.saiseikai-arida.jp/index.html>
- 아사히신문 <https://www.asahi.com/>
- NHK <https://www3.nhk.or.jp/news/>
- 오사카부 <http://www.pref.osaka.lg.jp/default.html>
- 와카야마현청 <https://www.pref.wakayama.lg.jp/index.html>
- 요리우리신문 <https://www.yomiuri.co.jp/>
- 일본경제신문 <https://www.nikkei.com/>
- 홋카이도신문 <https://www.hokkaido-np.co.jp/>
- 홋카이도청 <http://www.pref.hokkaido.lg.jp/index.htm>
- 히타카신보 <https://www.hidakashimpo.co.jp/news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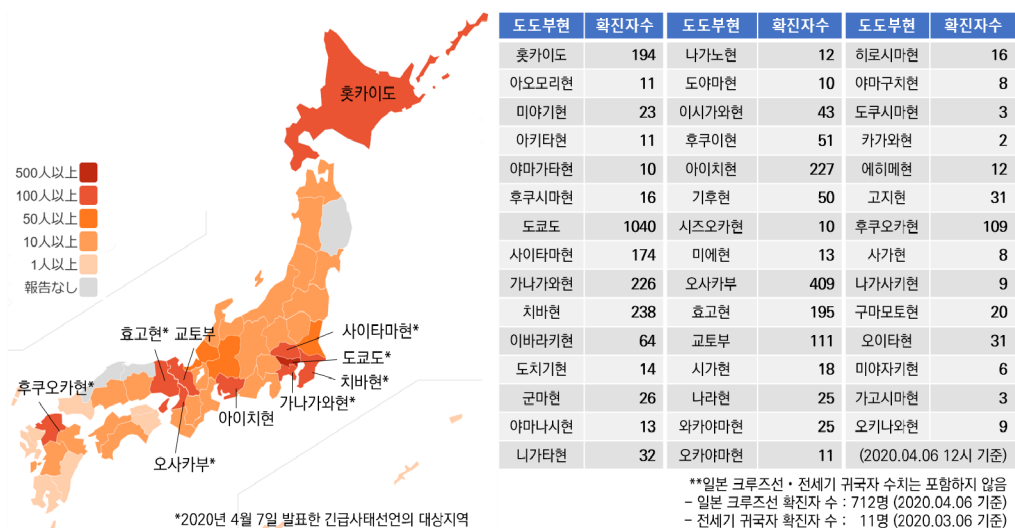
**배 윤** 통신원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강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일본 정부 및 도쿄도의 경제대책

### 개요

-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각 지자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에 영향을 받은 기업의 긴급 경영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휴업 수당 및 자금 등의 2/3를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간외 근로 등 개선조성금 (텔레워크 코스)」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음
- 기업의 긴급 경영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의 경제 대책과 더불어, 일본 경제의 중심지이자 일본 내 COVID-19 최다 발생지역(그림 1)인 도쿄도의 경제 대책에 대해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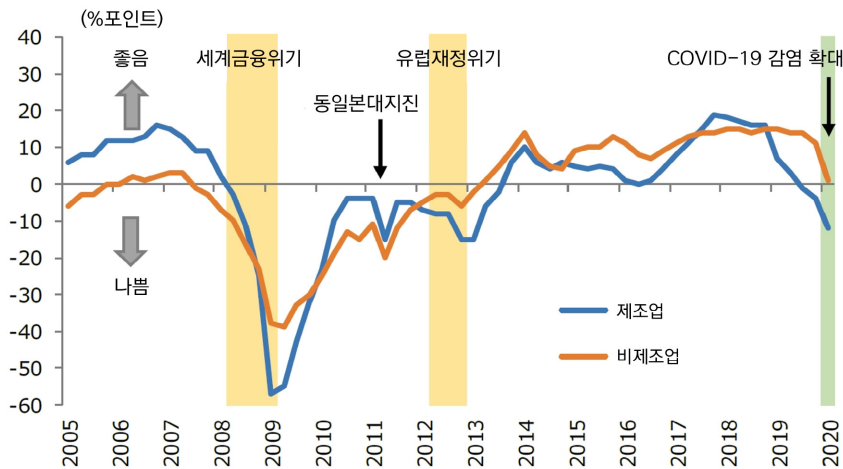


| 그림 1 | 도도부현별 확진자 수 (2020.04.06. 12시 기준)

(자료: <https://hazard.yahoo.co.jp/article/20200207>)

## COVID-19 위기의 일본 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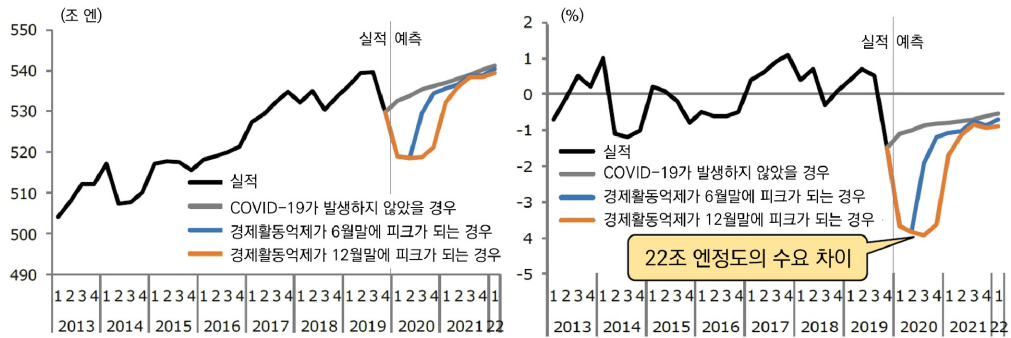
- 해외의 경제 악화와 2019년 10월의 소비세 인상(8%→10%)에 이어 일본 내 COVID-19의 감염 확대가 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도쿄 상공 리서치에 의하면, 1월 하순 이후 COVID-19에 의한 마이너스 실적을 지적한 상장 기업은 4월 초 기준, 226사에 달하고 매출액의 하향조정액은 1조 2,993억 엔에 이름
- 기업의 체감 경기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
- 일본 은행의 조사(그림 2)에 따르면, 제조업이 2013년 이후로 최저점을 기록하는 반면, 비교적 고수준을 유지해 온 비제조업도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일본의 실질 GDP는 소비세 인상 직후인 2019년 10월~12월 이후, 2분기 이상 연속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2019년 4/4분기: 전년도 대비 -2.8% 기록)



| 그림 2 | 일본 은행의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 (자료 : 미츠비시종합연구소)

## 일본 경제 전망

- 미츠비시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에는 COVID-19의 감염 확대에 의한 내외수 침체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연기로 2020년 중반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COVID-19의 종식 후에도 기업 수익, 고용·소득 환경의 악화로 소비는 한층 약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임
- 2020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COVID-19에 의한 경제활동 억제가 2020년 6월 말에 피크가 되는 경우(시나리오1)에는 전년 대비 -0.5%, 2020년 12월 말에 피크가 되는 경우(시나리오2)에는 전년 대비 -1.7%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그림 3 | 시나리오별 GDP의 전망 (자료 : 미츠비시 종합연구소)

## 정부의 지원책

- COVID-19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 속에서 기업의 긴급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 표 1 ~ 2와 같이 지원책을 마련함

| 표 1 | 일본 정부의 COVID-19에 대응한 기업 및 사업자 지원책-1

구분		상세 내용
고용 유지	고용정비 조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생노동성, 「고용조정조성금」</li> <li>- 일시적 휴업, 교육훈련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한 경우, 휴업수당, 자금등의 일부를 조성</li> </ul>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조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생노동성, 「초등학교 등의 임시휴업에 따른 보호자의 휴가취득지원」</li> <li>- 초등학교 자녀의 보호자인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 유급휴직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li> <li>• 원생노동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지원금」</li> <li>- 위탁 받아 개인으로 일하는 경우,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느라 업무가 불가능한 육아 세대를 지원</li> </ul>
	원생연금보험료 등의 유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연금기구, 「원생연금보험료등의 유예제도」</li> </ul>
자금 융통 지원	무이자·무담보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책금융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li> <li>- COVID-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신용, 담보와 관계없이 일률 금리로서, 융자 후 3년까지 0.9% 금리 인하 실시</li> <li>• 상공중금, 「위기대응융자」</li> <li>• 경제산업성, 「특별이자보급제도」</li> </ul>
	마루경용자 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책금융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마루경」</li> </ul>
	세이프티넷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세이프티넷 보증제도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2조 제5항 및 제6항」</li> <li>- 경영안정에 지장이 생긴 중소기업자를 일반보증과는 다른 별도의 보증 대상으로 하여 자금융통을 지원</li> </ul>
	세이프티넷 대출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산업성, 「세이프티넷대출 요건 완화」</li> <li>- 매출 감소액 등의 수치요건에 관계없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도 포함 하여 융자 대상으로 함</li> </ul>

| 표 2 | 일본 정부의 COVID-19에 대응한 기업 및 사업자 지원책-2

구분		상세 내용
자금 융통 지원	시간외근로등 개선조성금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생노동성, 「시간외 근로등 개선조성금 (텔레워크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 대책으로서, 텔레워크를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자</li> </ul> </li> <li>원생노동성, 「시간외 근로등 개선조성금 (직장의식개선특례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 대책으로서, 특별휴가의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중소기업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자</li> </ul> </li> </ul>
설비 투자 판로 개척	제조·산업·서비스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2020년 보정 제조·산업·서비스 생산성 향상 촉진 보조금」</li> <li>- 신제품·서비스 개발·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설비투자등을 지원</li> </ul>
	소규모사업자 지속화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상공회연합회, 「2020년 보정예산 소규모사업자지속화보조금(일반형)」</li> <li>일본상공회의소, 「2020년 보정예산 소규모사업자지속화 보조금」</li> </ul>
	IT도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 추진협의회, 「IT도입보조금 2020 1차공모 (수시 대응)」</li> <li>- 재택근무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텔레워크에 이용가능한 톨의 도입 등 IT 톨 도입에 의한 업무효율화를 지원</li> </ul>
세제 등의 지원	2020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 「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 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을 2020년 4월 16일 까지 연장」</li> </ul>
	납세 유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납세가 곤란한 분에게」</li> </ul>
	지방세 유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징수의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의 의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li> <li>-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된 경우</li> <li>-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li> <li>-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ul> </li> <li>환가의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의 영향으로 지방세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에 따라 환가의 유예제도가 인정</li> </ul> </li> </ul>
	사회보험료 유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생연금보험료등의 유예제도</li> <li>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및 개호보험의 보험료등의 징수유예</li> </ul>

## 도쿄도의 지원책

- 도쿄도의 기업 및 사업자 지원책은 다음 표 3과 같음

| 표 3 | 도쿄도의 COVID-19에 대응한 기업 및 사업자 지원책

구분	상세 내용
자금융통 경영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소기업자등 특별 상담 창구</li> <li>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 특별 상담 창구</li> </ul>
노동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노동상담 다이얼</li> </ul>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의 영향으로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 (2억 8천만 엔 한도)</li> </ul> </li> <li>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상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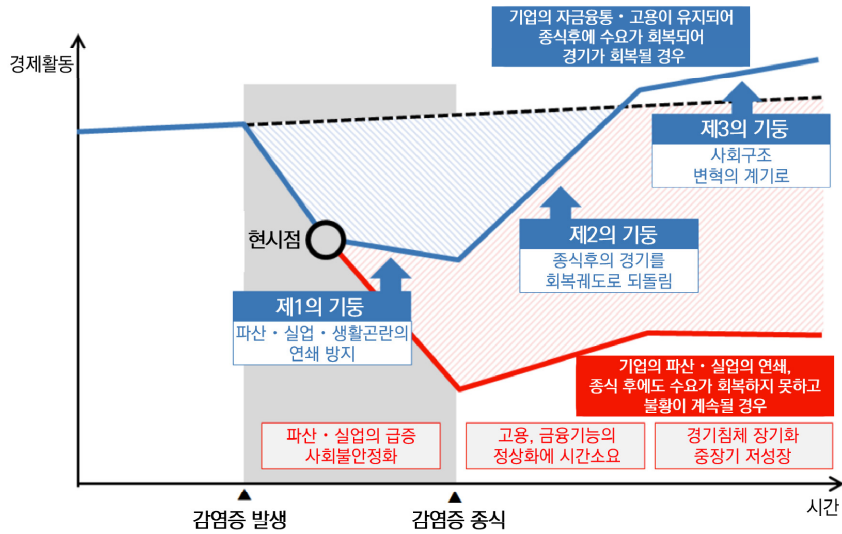
구분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의 영향으로 매출이 5% 이상 감소하고, 보증유자를 이용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 (2억 8천만 엔 한도)</li> <li>• 위기대응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위기관련 보증의 구시정촌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융자 지원 (2억 8천만 엔 한도)</li> </ul> </li> </ul>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영 과제에 대한 전문가 파견</li> <li>- COVID-19로 인해 경영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중소기업진단사 등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경영개선 도모</li> </ul>
판로개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판로개척 조성사업</li> <li>- COVID-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도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출전비용의 일부를 지원 (150만 엔 한도)</li> </ul>
휴업등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종업원의 생활 자금 융자(COVID-19 긴급대책 융자)</li>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휴업 등 지원 사업 (전문가 파견)</li>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고용 환경 정비 촉진 사업</li> </ul>
텔레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속 긴급대책(텔레워크) 조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대책으로서 텔레워크를 도입하는 경우, 기기와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경비를 보조</li> </ul> </li> <li>• 텔레워크 도입 모델 체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워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도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텔레워크 체험기기를 무상 대여</li> </ul> </li> <li>• 텔레워크 온라인 세미나</li> </ul>

자료 : 도쿄도 산업노동국 (2020.04.07.기준)

## 기업 및 개인의 지원과 더불어 사회구조 변혁의 계기로

- COVID-19는 일본 및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전개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미츠비시 종합연구소는 일본의 경제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이번 감염증에 의한 경제 영향의 특징은 감염 발생기에는 경제활동의 침체로 상업의 매출이 증발하지만 소득 감소, 고용 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면, 감염 종식 후에는 잠재화된 수요가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음
- 때문에 중요 경제 대책으로서 기업의 자금 유통과 고용 지원이 관건임
- 미츠비시 종합 연구소는 현재의 감염 발생기, 감염 종식 후, 그리고 나아가 사회구조의 변혁을 위해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경제 대책을 제안하고 있음 (그림 4)
- 기업의 파산과 실직, 나아가 잠재 수요 상실에 따른 위기 확대를 피할 수 있다면, 감염 종식 후의 경기를 회복 궤도로 되돌릴 수 있음
- 또한 이번 COVID-19의 경험을 사회 구조 변혁의 계기로 삼는 미래 지향적인 대응이 중요함





| 그림 4 | 2가지 시나리오의 분기점

## 참고문헌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まとめ (<https://hazard.yahoo.co.jp/article/20200207>)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世界・日本経済への影響と経済対策提言,  
2020.04.06
- 新型コロナウイルス緊急経営支援コーナー〜政府等の企業向け支援策  
(<https://www.tkc.jp/lp/corona#sec01>)
- 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 (都道府県別)  
(<https://j-net21.smrj.go.jp/support/tsdlje00000085bc.html>)

김지윤 통신원

(도쿄대학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jiyoon-k@iis.u-tokyo.ac.jp